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와 인격권

성 동 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한 여성 댄스 가수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인의 자살 동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평소 고인에 대해 심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던 네티즌들의 '악플'이 고인을 자살로 이끈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고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뉴스 공간에서, 특히 댓글은 이용자의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며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호작용장치라 할 수 있다. 같은 뉴스를 읽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와는 다른 인터넷 뉴스의 획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포털의 경우, 이용자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김은미·선유화, 2006). 하지만 댓글이 긍정적인 기능 보다는 역효과를 양산시키면서 댓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악의적인 댓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네티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인터넷 실명제'와 맞물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네티즌들의 댓글을 기사 작성 및 보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언론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듯하다.

많은 언론들은 그동안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 이를 기사화하고 전달해왔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주요 취재 소스로 활용해 온 것이다. 언론사들은 이를 연예뉴스에만 한정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이슈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뉴스에서도 자주 인용해 기사화했다. 언론윤리에 입각한 보도에서 취재원 명시는 매우 중요하다. 취재원이 명시되면 인용이 가능해지고 의심이 가는 내용은 발설자가 명확하므로 즉각 내용의 진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옥조, 2001). 하지만 익명의 네티즌들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댓글은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취재원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각종 사회 현안 및 특정 인물에 대해 발언한 내용 중 각종 의혹과 비

난, 추측성 언급 등을 담은 의견까지도 철저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에 인용하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을 도와야 할 언론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손쉽게 취재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왜곡된 보도가 되기 쉽다.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냐는 왜곡된 보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강명구, 1994). 댓글을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댓글을 취재원으로 사용한 보도는 왜곡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네티즌의 이름을 빌려 무분별하게 수집된 의견을 걸러내지 않고 보도했을 경우, 해당 인물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네티즌의 의견을 익명의 취재원으로 활용해 인용·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

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네티즌을 이용한 인용보도가 보도당사자의 인격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티즌의 이름을 빌려
무분별하게 수집된 의견을
여과없이 보도할 경우
인격권 침해할 수 있어**

2 인터넷 미디어와 댓글 열풍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장점은 상호작용성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즉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은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의 뉴스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상호작용장치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용

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뉴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달기' 또는 '게시판'과 '토론' 등의 메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메뉴들을 이용하여 네티즌들은 동시에, 혹은 비동시적으로 일대일, 또는 다대다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댓글'은 '독자의견 달기' 또는 '게시판'과 '토론'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댓글'은 '리플'(reply)로도 불리며, 원문 기사 또는 원문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또 다른 의견 및 정보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댓글'의 등장은 게시판 메뉴의 기술적 진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게시판은 읽는 사람이 게시된 글을 추천하는 기능과 글의 조회수 정보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었고, 이후 원문 기사나 먼저 게시된 글과는 다른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는 '답글'기능과 동일한 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댓글'기능이 추가되었다. '댓글'은 이용자들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맺음에 대한 욕구, 매스미디어만 존재하던 시대에는 표출하지 못했던 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이 혼합되

면서 확산되었다. 이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수용자들을 능동적 수용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제 '댓글'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가운데,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성동규, 2006).

댓글이 수행하는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기능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댓글'은 게재된 뉴스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댓글'은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이 다르거나 기사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해당 뉴스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가 '댓글'에 게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대표 축구팀이 경기에 패배한 후, 관중석에서 '실망'이라는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축구팬의 사진을 경기 자체에 대해 실망하는 팬들의 모습이라는 해설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실망'의 의미가 경기 패배에 대한 것이 아닌 축구협회의 행정에 대한 '실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이 '댓글'을 통해 알려진 경우가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댓글

이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들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의 사례에서 기사 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이 네티즌들의 감시와 견제에 무심하다면 댓글이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은 의미가 없어진다.

둘째, '댓글'은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한다. 원문 기사보다 '댓글'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댓글'은 단순히 원문 기사에 대한 반응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주장이나 독립적인 정보, 즉 뉴스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뉴스사이트에서는 '댓글'을 기사형식으로 편집하여 따로 게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언론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댓글 자체는 객관적인 취재원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양적 측면에서 '댓글'의 존재여부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이용자가 기사에 대한 흥미를 갖거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의제설정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부사이트에서는

'댓글'이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기사를 분류하여 게재하기도 한다. 댓글이 이렇게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댓글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댓글'은 읽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및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댓글'은 원문 기사의 내용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지도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하여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댓글'을 읽고 쓰는 과정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은 '댓글'을 읽으면서 이슈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댓글' 쓰기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댓글'은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던 여론 형성 과정의 주도권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댓글의 여론 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자살한 여자 가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연예

인과 관련된 댓글의 경우 선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넷째, '댓글' 자체는 원문 기사의 일부로 기능하기도 한다. '댓글'을 쓴 이용자는 원문 기사 작성자와 공동으로 기사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댓글'과 원문 기사는 웹사이트의 동일한 페이지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원문 기사를 읽은 후 댓글을 살펴봄으로써 원문 기사가 다룬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재해석하기도 한다(성동규, 2006). 원문 기사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댓글은 수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네티즌들이 언론사와 수용자의 입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댓글'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댓글'의 역기능은 인신공격이나 논점이 어긋난 비판으로 이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칼 포퍼가 얘기한 것처럼 공중의 의견이 단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댓글의 내용은 본인의 주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혹은 어떤 소재든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봉길 의사에게까지 악플이 달린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류지영, 2007. 2. 27).

댓글은 이렇게 다양한 공중의 의견이 충돌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의견

**댓글이 만들어낸 여론을
비판적·객관적 시각에서 검증해
전체 여론이 댓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충돌을 야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적 댓글은 악플로 돌변하고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자아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댓글을 언론이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악플의 내용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에서 쓰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보도자료화한다면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없을 것이다. 댓글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태도는 댓글이

만들어낸 여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하여 전체 여론이 댓글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언론이 댓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왔으며,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양산해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언론보도와 인격권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직접 체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부터 어떤 영화를 볼까 하는 사사로운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종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만약 진실하지 않다면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 폐해는 실로 가공할 것이다(김옥조, 2001).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언론보도의 영역과 개념이 변화하고 일반 수용자가 뉴스의 생산자가 되었지만, 언론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

다는 대명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은 진실할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에 존재의의를 두고 있는데 만약 언론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바로 그 순간 언론은 제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있어서 진실은 저널리즘 바로 그 자체이다.

언론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취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취재원은 작품이나 기사 재료의 출처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재원에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댓글을 취재원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댓글은 이성애 근거해 쓴 책이나 직접 취재를 통해 얻어진 보도자료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일 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원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댓글을 보도자료로 활용해 기사를 쓰고자 한다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기사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 혹은 다른 보도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인용해 원 자료의 의미를 곡해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댓글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댓글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느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댓글을 인용하려면 그 댓글이 의미하는 맥락이나 그 댓글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추측성 댓글과 감정적 호소가 주를 이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자살 보도의 경우 대부분의 댓글이 자살 혹은 타살 여부에 대한 추측성 댓글이나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등의 감정적 호소에 가까운 댓글이 많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쓰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한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진실성 확보는 언론보도의 핵심적 가치이자 책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의 의미는 가치중

립적임을 의미한다(한국언론재단, 2000). 그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객관적이어야만 하는데, 댓글은 가치중립적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댓글이 형성시킨 여론에 부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내용을 쏟아 내거나 댓글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댓글을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도는 저널리즘 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이 보도내용으로 버젓이 쓰였을 경우 당사자는 심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댓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인격권이란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일신전속성(권리 중에서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성질,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성질)으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

며, 민법은 이들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격권은 생명·신체·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성립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이재진, 2003).

인격권 침해가 분명 불법적 행위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사이버상의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2007년 7월부터 악성 댓글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의문

이다(최강, 2007 2. 23).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최근 몇 년 사이 악플의 폐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만하다. 언론보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악플에 대해 비판과 견제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댓글을 취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희생자들을 양산해 낸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최근의 몇몇 언론보도는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해 기사화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실패하는 문제점 노출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언론보도는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보도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실패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또한, 보도를 통해 악플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악플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 2005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똥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개똥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댓글을 통해 한 개인

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는 잘못된 댓글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내었어야 했다. 하지만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들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보다는 선정성 위주의 보도에 주력했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댓글의 내용은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사용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취재원 확보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댓글이 취재원으로써 활용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자살한 여성 연예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악플로 인해 상처를 입은 고인이,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기사자료로 활용한 언론들에 의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타살의혹과 관련하여 남자친구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추측성 댓글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현재 자살

한 여성 텔런트의 남자친구는 주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감하고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측성 댓글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의 죽음에 관해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 텔런트와 가까운 사이였던 남자친구는 네티즌들에 의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양산해내는 댓글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사실 규명에 집중하기보다 댓글을 사용한 선정적 보도에 치우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론

인터넷의 등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 각광을 받았다. 댓글은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신문이 도입하고 있는 시민기자 제도와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달기와 같은 토론 공간은 시민의 목소

리가 반영된 뉴스 보도와 함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의 폭을 넓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공론장 형성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김병철, 2004). 실제로 네티즌들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댓글의 영향력 또한 막강해 졌다.

댓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그것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특히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특히 공인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연예인의 자살과도 큰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댓글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해 내고 그것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댓글을 무분별하게 인용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언론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보도

행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른 여론형성은 언론이 사회에 대해 안고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어지는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들을 뽑아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제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언론의 기능은 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노진남, 1995).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 취재원으로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든 댓글을 보도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론 보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디어, 특히 언론은 태동부터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저널리즘은 환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가치 체제는 인권, 자유, 정의, 민주, 진실, 객관성, 정직, 프라이버시와 같은 일련의 윤리적 개념 위에 정리되어 있다(김옥조, 2001). 언론이 이러한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불분명한 취재원을 보도자료로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언론의 윤리적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

보도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서

언론보도의 근본마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일반 시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일부 네티즌들의 과격한 악성댓글은 많은 부작용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댓글을 보도자료로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일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

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취재원 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1994). 『저널리즘이론』. 서울: 나남출판.
- 김병철(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4호. 147~180.
- 김옥조(2001). 『미디어 윤리』. 서울: 중앙 M&B.
- 김은미·선유화(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3~64.
- 노진남(1995). 경쟁으로 유실된 언론 윤리. 『저널리즘 비평』. 통권 15호. 69~71쪽.
- 류지영(2007. 2. 27). 애국지사에게까지 ‘악플’ 화살. 『서울신문』.
- 성동규(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 이재진(2003).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서울: 나남출판.
- 최 광(2007. 2. 23). 정통부, 작성자 확인 쉽게 시행령 개정. 『서울경제신문』.
- 한국언론재단(2000). 『언론인의 직업 윤리』. 서울: 한국언론재단.